

정부가 이런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작년 12월 내놓은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에서 다양한 현금성 출산 장려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0~1세 영아에게 2022년부터 월 30만원, 2025년부터는 월 50만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출산 땀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해 300만원을, 부부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때 최대 1천5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1) 인구재앙 고속도로에 올라탄 대한민국..백약이 무효인가

김종현 입력 2021. 01. 04. 06:00 수정 2021. 01. 04. 16:23 댓글 5591 개

40년 후엔 인구 반 토막..국가 토대가 흔들린다



[연합뉴스 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 5천만 인구가 2천 500만명 이하로 줄어든다. 생산 인력도, 학생도, 군에 입대할 자원도 반토막 이하로 감소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예측한 40년 후인 2060년의 대한민국 모습이다. 지금의 40대 이하 젊은 세대가 마주할 현실이다.

행정안전부가 3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는 이런 인구재앙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작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천 182만 9천 23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838명 감소했다. 우리

현대사에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시골의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느낌이다.

인구재앙 비상...코로나 사태로 출산율 급전직하

작년에 출생자는 27 만 5 천 815 명으로 10.7%(3 만 2 천 882 명)나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30 만 7 천 764 명으로 3.1%(9 천 269 명) 늘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출생 감소는 아찔할 정도다. 2017 년 40 만명 선이 무너진 지 불과 3 년 만에 30 만명 선 밑으로 떨어졌다. 출생아 40 만명 선은 15 년간 유지됐으나 30 만명 선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래픽] 2011~2020 년 주민등록 인구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3 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 년 12 월 31 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 천 182 만 9 천 23 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2 만 838 명(0.04%)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kr/LeYN1

이는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가임 여성 1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작년 1 분기 0.90 명, 2 분기와 3 분기 0.84 명이었다.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 수준이다. 세계 평균(2.4 명)이나 복지국가가 많은 유럽연합(EU) 국가의 평균(1.59 명)과 너무 차이가 크다.

상황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젊은 층이 결혼이나 출산 계획을 미루면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인한 임신 유예와 혼인 감소 등을 고려할 때 2022 년엔 합계출산율이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상 비관 시나리오인 0.72 명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연구진은 코로나가 몰고 온 고용·소득 충격이 20~30 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점이 혼인과 임신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비대면 생활 방식 확산과 경쟁 환경 심화 등도 부정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래픽] 합계출산율 추이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5 일 통계청이 발표한 '9 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가임 여성 1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3 분기 0.84 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0.05 명 줄면서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kr/LeYN1

생산·납세·병역은 누가...국가 토대가 흔들린다

2011~2020년 주민등록 인구 추이



출생·사망 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YONHAP NEWS 연합뉴스

김계리 인턴 / 20210103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kr/LeYN1

한경연은 작년 7월 보고서에서 40년 후인 2060년엔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고 생산가능인구는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생산가능인구 한 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수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약 5명이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가임여성 1명당 기준)



자료/ 통계청

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0201125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facebook.com/yonhapnews](https://www.facebook.com/yonhapnews) [youtube.com/LeYN1](https://www.youtube.com/channel/UC1tuneYkr/LeYN1)

노인 한 명을 부양하지만, 40년 후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한 명을 떠받쳐야 한다는 얘기다. 한은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26~2035년 경제성장률이 0.4%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작년 12월 내놓은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에서 다양한 현금성 출산 장려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0~1세 영아에게 2022년부터 월 30만원, 2025년부터는 월 50만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출산 땀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해 300 만원을, 부부가 동시에 3 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때 최대 1 천 500 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올해 36 조원을 포함해 2025 년까지 총 196 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 감소를 막고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 4 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준비했다"고 했다.

하지만 돈으로 무너진 출산율을 되돌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2006 년부터 작년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 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으나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저출산은 복합적으로 얽힌 원인에 따른 총체적인 결과로, 문제의 일면만 보고 세우는 대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아동, 청년, 은퇴 세대 등 모든 세대에 대한 '삶의 질 제고'를 4 차 기본계획의 방향으로 삼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인구학 전문가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저출산 관련 복지 예산도 중요하지만,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다"면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성공에 대한 경쟁 일변도의 획일적 가치관, 인구 자원의 서울·수도권 집중 등 근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추세를 되돌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imj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